

민간소비 장기 침체 배경과 전망

민간소비 장기 침체 늪에 빠짐

국내 민간소비가 장기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해마다 경제성장률을 밀돌았는데, 2011년 하반기에는 1%대로 추락했다. 외환위기 이전인 1988~1997년의 10년간 연평균 소비증가율은 8.1%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8.0%를 상회했다. 이후 소비증가율과 성장률 간의 격차는 계속 벌어졌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8~2011년의 4년 동안 연평균 소비증가율은 2.0%로 GDP증가율 3.1%보다 1.1%포인트나 낮아졌다. 소비증가율이 떨어지면서 국내총생산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의 민간소비 비중은 60.3%에 달했으나 2011년에는 51.2%로 낮아졌다. 경제성장률에 대한 민간소비의 기여율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7년에는 53.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나, 그 이후 계속 낮아져 지난해 4분기(9~12월)에는 17.1%로 추락했다. 민간소비 침체는 한국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경기 부진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수출의존도를 높여 경제 불안정성을 높이고, 성장잠재력의 저하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경기 양극화를 확대시켜 업종간·계층간 소득 격차를 더욱 악화시킨다.

소득은 줄고 빚은 느는 가계 형편

민간소비가 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소비자들이 쓸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국민소득 증가율은 항상 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했다. 외환위기 이듬해인 1998년 이후 2011년까지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2%였으나 국민소득증가율은 3.2%에 머물렀다. 열심히 일은 했지만 소비자들의 호주머니 사정은 별로 나아진 게 없는 것이다.

물가를 감안한 가구당 월평균 실질 소득은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매년 1~2%대의 저조한 수준에 그쳤다. 가계 소득이 오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때문이다. 먼저 수출과 내수 경기의 괴리(乖離)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수출이 호조를 보이더라도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교역조건이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수출품 1단위로 구매할 수 있는 수입품의 양을 나타내주는 순상품교역조건은 계속 나빠져 1995년 175.3에서 2011년에는 78.8로 추락했다. 이는 수출 상품의 단가는 하락하는 반면 수입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음을 나타낸다. 수출이 낮은 원화 가치에 의한 가격 경쟁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싸게 팔고 비싸게 사들이는 밀지는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원유나 부품소재와 같은 원부자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 수출로 번 돈 이상으로 해외로 유출되는 것도 문제다. 수입이 증가하지

않는 또 다른 주요 원인은 소득 원천인 국내 고용 사정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점이다. 취업자증가율을 경제성장률로 나눈 고용탄성치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급락하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 만큼 취업자가 늘지 않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뜻한다. 외환위기 전인 1984~1997년 기간 동안에는 고용탄성치가 연평균 0.350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인 1998~2008년 사이에는 0.311로 낮아졌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2012년에는 0.290으로 더 크게 낮아졌다. 매년 늘어나는 신규취업자의 대부분도 높은 소득을 보장하는 괜찮은 일자리는 아니다. 취업시간별로는 36시간 미만,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이 신규취업자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2011년의 경우 41만 5,000개 신규취업자 증가분 중에 36시간 미만이 91.7만개, 50세 이상이 44만개였다.(구체적으로 수치를 넣어주십시오)

소비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치도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주가 변동이 극심하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동산 가치와 금융 저축, 주식 가치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소득과 자산가치는 줄어드는데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공적(公的) 비(非)소비지출액도 늘어나고 있어 소비 여력은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계부채는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02년에 464.7조원이었으나 2011년까지 연평균 7.8%씩 증가해 작년말 912.9조 원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가계의 연평균 처분가능소득증가율 5.7%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가구당 평균 부채는 2011년 현재 3679만 원으로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3283만 원을 웃돈다. 가계 부채의 대부분이 변동금리 방식이어서 금리 상승은 곧바로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기준 금리 인상과 가계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2011년 가계의 이자 비용은 55조 5000억원에 달하고, 이로 인한 실질 소비 감소는 34조 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더해 조기 퇴직과 노후 대책 등을 위한 연금과 사회 보험 비용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민간소비 부진 장기화될 듯...해외소비자 유치 전략 등 발상 전환 필요

민간소비 부진은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원유와 부품소재 등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 구조가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 어렵고,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해소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치권은 복지지출을 계속 늘릴 태세여서 정부의 경기 활성화 여력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점도 소비 부진을 촉진하는 요인이다. 경기 부진과 노령화 등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질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일본처럼 현재의

소비를 줄이고 미래를 대비하려는 욕구가 더욱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외 경기가 빨리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미국은 부동산발(發) 금융 위기를 완전히 털어내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유럽은 재정난을 극복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중국 등 개발도상국 경기도 조정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 주도형인 경제 특성상 대외(對外) 경기 둔화는 국내 경기 회복 전망을 어둡게 한다. 민간소비의 장기 침체 현상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내수 활성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내외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한 고용 증대가 시급하다. 또한 수요가 늘고 있는 의료, 관광, 사회서비스업과 같은 각종 내수 서비스 산업의 육성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해외 소비자들을 국내로 유치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내 대형 유통업을 보다 발전시켜 중국, 일본, 태국 등 아시아 지역 소비자들이 한국에 몰려들게 함으로써 한국을 '아시아 소비 허브'로 만드는 것이다. 민간소비를 바탕으로 내수 규모를 확대하지 못하고서는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내국인 해외소비와 외국인 국내소비

민간소비 통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요)

첫번째는 국내 소비자들이 한국에서 소비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내국인들이 외국에서 돈을 쓰는 것이며, 세 번째는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지출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국내 소비자들이 외국에서 소비하는 것은 민간소비에는 포함이 되지만 사실 이 부분은 국내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 만일 내국인들이 외국에서 쓰는 돈이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지출하는 규모보다 크다면 전체 민간소비액은 늘어나지만 정작 내수 활성화와는 상관이 없다. 실제 민간소비 내역을 보면 이러한 '소비 누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 소비자들이 외국에서 지출하는 씬씀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국내 가계의 해외 지출액은 1997년 4조 7600억 원에서 2011년 21조 1000억 원으로 급증했고,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해외지출액의 비중은 같은 기간 1.8%에서 3.4%로 상승했다.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소비하는 지출액은 이에 크게 못 미친다. 비(非)거주자의 국내 소비 지출액은 1997년 3조 1000억원에서 2011년에 12조 7100억원으로 늘어나는데 그쳤다. 지난해의 경우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에서 쓰는 돈이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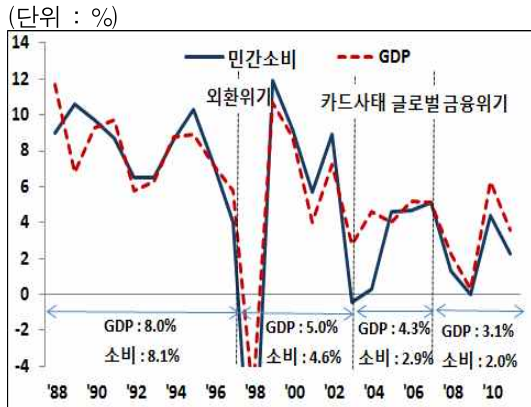
지출하는 액수보다 1.7배나 많은 것이다. 차액 만큼 국내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의 실질적인 내수 활성화 효과가 줄어들게 된다.(풀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내국인들의 해외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한국의 서비스 수지는 늘 적자상태이다. 외환위기 전인 1997년의 서비스수지 적자액은 20억 4000만 달러였으나 2011년에는 40억 4000만 달러로 두 배로 불어났다. 서비스 적자의 대부분은 여행수지 적자다. 여객이나 화물 같은 운송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흑자를 유학·연수나 일반 여행과 같은 여행 부문의 막대한 적자가 이를 모두 상쇄하고 있다.

해외지출이 늘어나면 국내 소비 재원(財源)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과 같다. 고소득층 지출로 저소득층 소득이 늘어 소비력이 상승하는 소득 계층간 낙수 효과((Trickle-down Effect)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낙수효과 설명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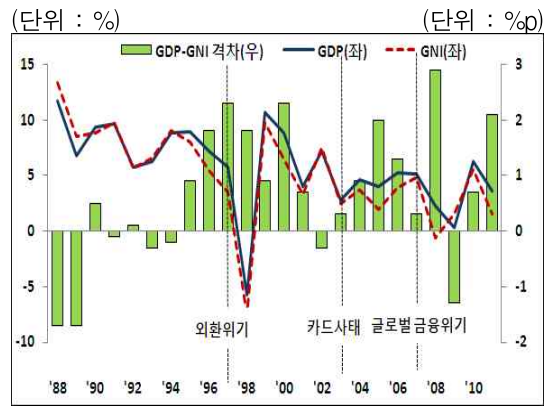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지출 규모는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에 의해 결정된다. 해외 지출이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는 교육, 관광과 같은 국내 서비스산업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고소득층의 해외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도 고가(高價)의 일류 명품을 개발하는 한편 부유층이 국내에서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해야 한다.

<민간소비 및 GDP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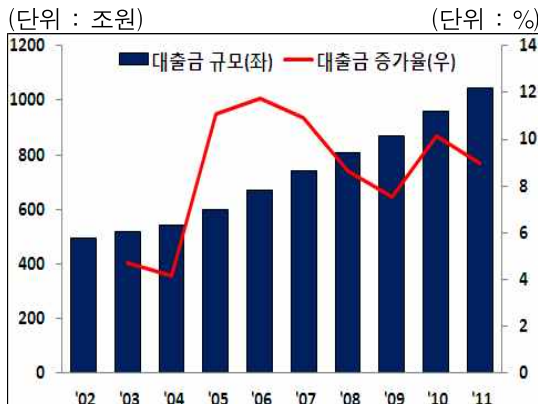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GDP-GNI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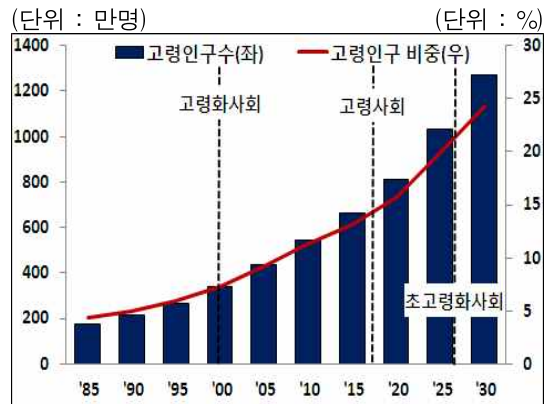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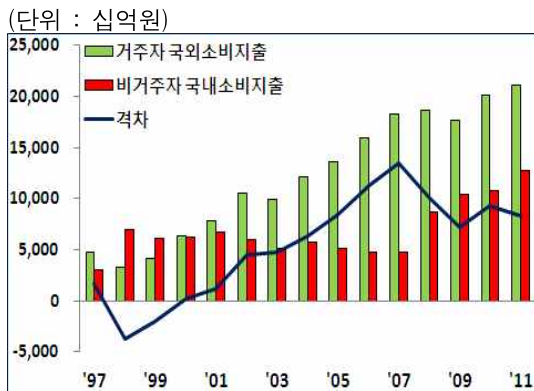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자금순환.
 주 :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부채는 대출금과 정부융자를 합해 산출.

<고령인구 추이>



자료 : 통계청
 주 : 2010년까지는 실측치(인구총조사)이고, 2011년부터는 장래인구추계임.

<거주자 국외소비지출과 비거주자 국내 소비지출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주 : 1) 명목 기준임
 2) 격차= 거주자 국외소비지출-비거주자 국내소비 지출.